

건강 칼럼

‘오다리’라면 절골술을 받는 것이 좋을까?

#50대 후반의 유혜영 씨(여·가명)는 어렸을 때부터 ‘오다리’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남들처럼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고 싶어도 휘어진 다리 때문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데 보기에 안 좋은 것은 둘째 치고, 요즘 들어 무릎이 자주 아픈 것 같아 걱정스러워 병원을 찾았다. “아직 관절염이 올 나이는 아님데, 오다리 때문에 그런 걸까요?” 검사 후 환자는 의사의 소견을 묻는다. “퇴행성관절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절염이 없으면 당장 수술할 필요는 없는데, 더 심해지기 전에 수술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술은 일명 오다리 교정술이라 불리는 ‘근위 경골 절골술’을 말한다. 다리가 오자로 휘면 무릎에 가해지는 힘을 고르게 분산 못 하고, 무릎 안쪽에 하중이 더 많이 쏠려 퇴행성 무릎관절염을 조기에 불러올 수 있다. 근위 교정 절골술은 안쪽으로 쏠린 무릎 중심축을 바꾸고 다



류승열  
현천병원 관절클리닉 진료원장

리를 일자로 바로 잡아 안쪽 관절에만 집중되는 부담을 바깥쪽으로 덜어 분산시켜준다. 관절을 보존하면서, 치료가 가능하다. 오다리라도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 유 씨처럼 오다리면서 퇴행성관절염이 진행되고, 그 진행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절골술을 고려할 수 있다. 절골술을 하는 목적은 퇴행성관절염 속도를 늦춰 인공관절수술을 하지 않고 내 무릎을 최대한 오래 쓰는 것이다. 수술 방법은 우선 경골에 금을 낸다. 뼈가 딱딱해 보여도 탄력이 있으므로 금을 내면 벌어진다. 금속판과 볼록으로 벌어진 모양을

교정하면 시간이 지나 틈 사이에 뼈가 채워지면서 다리가 똑바로 펴진다. 예전에는 수술 후 최소 6주까지 걸기를 조심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금속판 자체가 견고하고, 수술기술도 좋아져 2~3주 후부터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기를 권한다. 너무 오랫동안 발을 디디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무릎도 굳고 근육이 빠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CT를 찍었을 때 △관절 끝부분이 잘 살아 있고 △금을 낸 뼈도 원하는 각도로 잘 벌어져 있고 △금속판도 잘 고정돼 있으면 수술 1주일 후부터 천천히 발 딛기를 시도해 볼 수 있다.

환자 중 관절염이 동반되었다는 것은 연골이 닳았다는 것이다. 절골술은 뼈만 바르게 펴는 것이지 연골에는 손도 안 대는데 어떻게 관절염이 좋아질 수 있는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다. 보통 절골술을 할 때 뼈만 똑바로 펴는 것이 아니라 무릎관절 치료도 함께 한다. 관절내시경을 이용해 찢어지고 손상된 연골을 다듬거나 연골이 손상된 부위에 3~4mm의 미세한 구멍을 고른 간격으로 뚫어 골수세포를 흘러나오게 해 연골 결손을 치료하는 미세천공술 등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절골술은 흰 다리를 똑바로 펴고, 손상된 관절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퇴행성관절염 진행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다. 주로 무릎 안쪽에만 관절염이 있을 때 효과가 크다. 수술 후 환자들의 만족도도 꽤 높은 편이다. 무엇보다 절골술 덕분에 본인의 무릎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며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다리인 분들이 절골술을 고려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트럼프, 석탄 산업 활성화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석탄 산업 활성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발전을 통한 전력망 안정을 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국 에너지 활성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팔레스타인 소년 환자와 인사 나누는 마크롱 대통령



이집트 대통령실이 제공한 사진에 8일(현지 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집트 시나이반도 북부, 가자지구 접경에서 약 50km 떨어진 엘아리시 병원 내 팔레스타인 환자 병동을 방문해 치료 중인 팔레스타인 소년과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는 서민과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 소액대출 한도를 100만원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소액생계비 대출의 명칭을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바꾸고, 공급 규모와 대출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3월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말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기본 5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권 대출 연체가 없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연체자 역시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 용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새로운 한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모바일 앱 ‘서민금융 잇다’에서 4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공급 규모도 기존 연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은 지난해 3월 출시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25만 1,657명에게 2,079억 원이 지원됐다. 이용자 중 92.4%는 신용 점수 하위 10% 이하였고,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도 31.6%에 달했다. 직업군별로는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고용계층이 69%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로는 20~30대 비중이 45.2%를 차지했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1397)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과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고로 고통을 받는 경제약자들이 여전히 많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검찰총장 자녀 특혜 의혹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 특혜 의혹이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이른바 아빠 찬스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고위층들의 자녀 특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건강한 사회를 해치는 독소다. 특히 젊은이들의 꿈을 쏙 먹는 일이다. 일말백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검찰총장 딸 특혜나 수사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타끌도 되지 않는 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에서 검찰은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검찰의 무리한 포적 수사의 전형으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며 기이한 논리까지 개발한 노력이 눈물겹다”며 “야당 대표를 향한 정적 제거 작전이 법원에서 보기 좋게 퇴짜 맞은 점을 상기하고 검찰은 자중자해야 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검찰을 진두지휘하는 총장 딸 특혜 채용 문제는 가관”이라며 “내 눈의 돌보인 자기 조직 수장의 딸 문제나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여는 광역자치단체장도 SNS에 글을 올려 “내만 수괴를 석방할 때는 항고조차 하지 않던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장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부터 해명하는 게 도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강력한 개혁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활비를 지원해 왔기 때문에 전 사위가 2020년 타이 이스타넷에 채용된 뒤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 3천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논리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마위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